

정 치 개 혁

≡ 차례 ≡

1.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2. 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3. 부패사슬 끊기
4.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5. 미래의 과제

1.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 정치개혁의 세 가지 핵심 과제

당원과 국민에게 의사결정권을 돌려 준다, 소위 당권을 돌려 준다는 것이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위의 지도부를 어떻게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어떻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냐, 세번째는 정치인들이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정치행위를 하되, 다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7차회의 “정치개혁의 실현”에서 2003. 1. 23)

□ 현재의 정당제도는 물이 새는 배와 같아

지금 당내에서 정당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정당제도 바깥의 개혁과제는 뒤로 좀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 정당개혁을 먼저하고, 정당의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정당 내부질서가 정당개혁을 통해서 재편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국가제도에 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개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정당은 안전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험난한 바다 위에, 국민 민심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물이 새는 배는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제도는 물이 새는 배입니다. 살자면 부득이 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다시 해엄을 얼마간 치더라도 새로운 배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코 우리 정치인들이 안주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개혁을 제대로 못 해 내는 정당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정치전망입니다.

(KBS 특별 생방송 “盧武鉉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 1. 18)

□ 정치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치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만 불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치자금 논란이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만듭시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충정에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자금관련 기자회견에서 2003. 7. 21)

□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

우선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모두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불리,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속이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반성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데 동서고금에 진실한 고해성사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적극 협력하고 마무리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정당문화의 개혁, 그리고 정치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법자금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모두 다 합심해서 그러한 성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4당 대표 초청 회동에서 2003. 12. 14)

2. 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 권력의 유착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적 개혁과제

지난 1년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간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이 있습니다. 권·연관계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월권을 하거나 특권을 주고받았던 권연유착이 해소됐습니다. 힘들고 꺾꺾려운 일이 남아 있지만 꾸준히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권·권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력기관 인사는 국

민중성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힘 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습니다. 정(政)·권(權)·언(言)·재(財)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를 해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 특강에서 2004. 1. 10)

□ 우리나라,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 완전히 중립하고 있어

국회가 좀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한국의 선거문화, 선거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수준 모두 합쳐서 현재 우리가 하는 정치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싸우죠. 지난번 국회 13일간 헛바퀴만 돌렸지만, 옛날 습관이 남아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의 중립입니다. 지금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이 완전히 중립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 정보기관, 검찰 다 중립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야 할 기관은 확실히 독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위원회, 한국은행, 감사원 등이 독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치주의 수준을 얘기할 때 한국 법치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브라질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8)

□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돼

권력 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것이 과거 시대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암적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국민의정부에서부터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

니까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비단 정치권력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특권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일부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저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훗날 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만든 것, 이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아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 참여정부는 특권·유착의 반칙 청산하는 완결단계에 와 있는 중

민주주의, 저는 민주주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선진 민주국가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권력, 직접의 권력과 바로 투쟁이 시작됩니다. 직접의 권력이, 독재 또는 전제의 권력이 무너지고 나면 과거의 체제 속에서 남아 있던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또 벌어집니다.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상대를 인정하고, 소위 관용이라는 이름이지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단계 중에서 참여정부는 소위 특권과 유착의 반칙의 구조 또는 부패의 구조를 아마 거의 정리, 청산하는 과정을 거의 완결해 가는 단계에서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도 아마 거의 그 속에서 거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시 그와 같은 경향은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천 청사 공무원 격려 오찬에서 2007. 1. 4)

□ 아직 남아 있는 개혁 대상, 정부 밖에서는 언론, 안에서는 검찰

민주주의 개혁의 과정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 상생의 정치라든지 하는 소위 3단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과제는 남아있습시다만,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은 개혁은 거의 이제 마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정부 밖으로는 언론, 정부 안으로는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 아동, 청소년)에서 2007. 3. 13)

□ 특권과 유착 구조의 해체, 참여정부가 이룬 민주주의의 진일보

특권과 반칙,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가장 확실하게 해체된 것이 언제입니까? 사무리를 언제 지었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사무리된 것입니다. 적어도 4대 권력기관 정도는 특권과 유착구조가 해체됐습니다. 트럭으로 돈 싣고 가고 싣고 오고하는 수준의 일은 이제 다시는 반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정경유착 확실하게 끝난 것이죠?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향상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의 일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위 오찬에서 2006. 12. 28)

3. 부패사슬 끊기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고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서 부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터통신 회견에서 2003. 10. 17)

□ 부패방지, 대통령이 앞장설 것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의 나옴, 비자금의 나옴이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 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정치인이 ‘나만 받았는가, 누구누구는 받지 않았는가’하며 서로의 잘못에 의지하고, 또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핑계로 적당하게 피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비자금이 또 터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2003. 10. 13)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는 부패 추방의 첫걸음입니다.

(반부패 세계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2003. 5. 31)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부방위가 범정부적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 중심을 잡고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사례와 자료를 종합한 뒤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대안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공직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에 대해서도 부방위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부패의 원인 분석과 추방 대안을 마련해 올해 국가적 차원의 부패청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월1회 직접 주재함으로써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대통령이 앞장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4. 5. 24)

□ 부패 문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부패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부패는 투명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 한데서 싹틔웁니다. 법과 제도, 행정 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분석과 접근이 중요합니다.

(제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04. 2. 18)

부패 문제도 권력형 비리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부패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과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총론에 머물지 말고 각론까지 접근해 주십시오. 또 부패 실태조사의 경우는 매우 체계적으로 법률의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해 주십시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3. 11. 3)

2003년 한 해 우리가 보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소위 윗물 부패에 관한 커다란 홍역을 치렀고 그 이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정치영역에서의 부패는 상당히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외부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부패청산, 부패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이런 노력을 좀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대체로 여러 보고가 있었지만 그 보고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제도개선을 거부하면서 의식개혁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문제해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개선 없이 의식개혁이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2005. 2. 3)

□ 부패청산과 투명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약속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약실천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 한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투명사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듯이 부패청산과 투명화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합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서 2005. 3. 9)

□ 온 나라에 청렴정책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5년차인 만큼 ‘시스템과 제도개선 중심의 범정부적 반부패 시책 추진의 성과를 확고히 유지시키고,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분야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청렴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르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청렴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한 기업 투명성 제고대책도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 성과가 뒷걸음질하거나 선거를 틈타서 역류(逆流)의 독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회가 되는 대로 기업이나 정치권, 국민들에게 정부의 이와 같은 강

력한 의지를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07. 4. 13)

4.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 한국정치의 가장 나쁜 병폐, 지역주의

나는 한국 전체 정치구도의 변화를 원합니다. 또 다른 지역구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기존의 정치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정치에 나쁜 병폐 첫번째가 지역구도입니다. 그런 기존의 정치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만 분열하고 한나라당은 더 강하게 있으면 호남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더 이상 영남 주민들도 증오와 분노만 부추기는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틀의 역사의 흐름은 낡은 질서가 붕괴되고 새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입니다. 일차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투명한 정치, 상향식 정치로 갑니다. 내가 신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질서 중 가장 강고한 것이 지역주의입니다. 상당히 오래 버틸 것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2003. 9. 17)

□ 국민통합, 지역주의 청산은 여전한 과제

대통령이 선거구도에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매우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망국의 요인 또는 역사발전의 걸림돌들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항상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입니다.

지배층의 분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 왔고 또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를 고비로 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연정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05. 7. 29)

□ 지역주의 극복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불가능

그러나 아직도 남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욕설과 몸싸움, 태업과 공전을 일삼고 공천헌금과 정치부패가 반복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긴 것은 제가 일관되게 지역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2007. 5. 18)

□ 대결주의,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참여정부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영남사람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호남에서 물표를 주셔서 가지고 저는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지켜 내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13% 득표를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32%를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지요. 그

렇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대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이 드러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미국·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즉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5. 미래의 과제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관용과 상생의 정치로 가야

지난 2년 반을 통해 느낀 점은 대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잘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타도하기 위한 경쟁,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처내기 위한 술수 찾기에 몰두하고 온갖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공세로 인간성이 황폐해지는 정치였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수도법 등이 다시 헌재판결을 통해서 번복된 것,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는 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해임건의안 남발이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발목잡기가 그런 것들이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도 있었습니다.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투쟁의 정치에서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합니다. 지난 총선 전후에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것이 상생의 정치였습니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관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2005. 8. 31)

□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 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 정치권이 개헌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국민들이 힘 모아야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하고 저에게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각 당이 당론 확인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하였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저의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 4. 29)

□ 헌법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규범을 담을 때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그리고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

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한 특별담화에서 2007. 1. 9)

□ 헌법적 정치제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과연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면책특권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책특권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이용한 반칙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이를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권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와 정신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

권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 정치관계법은 헌정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이며, 헌법상의 통치기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 규정은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 관권·금권·조직 선거를 하면서 야당의 바람 선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의식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은 활발한 선거참여를 ‘과열’로 낙인찍었고, 이러한 인식의 잔재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와 선거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관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그때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우쳐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고 할 만큼 강화되어 왔습니다.

규제 중심의 정치관계법은 과거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유산입니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더 많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선거활동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 7. 17)

좋은 규범이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모든 규범의 근본입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헌법적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남은 제도와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번거롭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라면
해야 합니다. 역사는 논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제기, 토론과 대안의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도 성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헌법과 제도를 갖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 할 의
무가 있습니다. 이번 제헌절이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 7. 17)